

시선

사설

지층처럼 켜켜이 쌓인 공약
언제까지 쌓아 둘 것인가

임기 막바지인 양 캠퍼스 제49대 총학생회(총학) 공약 이행도를 점검했다. 올해 총학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해가 지나 3월 재보궐 선거까지 치르고서야 비로소 총학을 꾸릴 수 있었고 국제캠퍼스(국제캠) 역시 보궐선거를 거쳤다. 선거 과정에서는 잡음이 일기도 했다. 임기도 짧았지만 양 캠퍼스 총학 모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양 캠퍼스 총학 모두 1학기 이후 주요 의제로 급부상한 대기순번제 폐지를 이끌어냈다. 서울캠 총학은 소모임 및 학회지원, 영회제, 대동제 등을 무사히 처리했다. 국제캠 총학 역시 24시간 무인프린터 설치, 의료기관 제휴 등 복지 공약을 이행하고 축제를 성대히 치러냈다. 사안의 경증을 떠나 공약을 이행한 것은 분명한 공로이며,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를 내림이 마땅하다.

그러나 눈에 쉬이 보이는 공약을 젖혀 보면 풀어내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 서울캠의 학생회 회계감사 도입과 교육권 문제 해결, 국제캠의 캠퍼스 이원화 문제 해결과 같은, 하나같이 굵직한 정책공약들이다. 여리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대답론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번갯불에 콩 볶듯 해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정당해지는 이유는 이 공약들이 최근 몇 년간 쌓여온 의제라는 점이다.

서울캠 47대 총학이 세칙까지 만들며 그 기반을 다진 학생회 회계감사는 연년을 이어와 현재 총학의 손에 넘어왔다. 개정을 위해선 전학대회를 통한 표결이 필요하지만 공약을 넘겨받은 서울캠 49대 총학은 전학대회를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 대동제 준비로 바빴다는 것이 이유다. 전학대회가 성사되지 않아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전학대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에서 공약 이행 의지가 있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교육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전입금 문제 삼으며 의제를 설정했지만 못 구성원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총학의 주장이 힘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오히려 후마니티스 칼리지가 재도약의 일환으로 강의를 늘려 일정부분 공약을 이행시켜 준 꽃이 됐다.

본분교 통합 이후 국제캠 총학이 크고 작게 주장해온 이원화 문제 해결은 올해도 지지부진했다. 캠퍼스 명칭을 변경하고 이원화 TF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국제캠 49대 총학이지만, 아직까지 TF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캠퍼스 명칭 변경이라는, 모든 구성원의 의중을 통합해야 하는 거대한 담론 역시 수면 아래 잠겨 있을 뿐이다. 임기가 짧아 시간이 부족했다는 해명도 말이 되지 않는다. 올해 국제캠 총학 회장은 48대 총학에서도 중책을 맡으며 당시 프라임사업에서 이원화 문제에 대한 ‘부총장의 서면 약속’까지 얻어낸 바 있다.

이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묵은 공약에 대한 진부한 질책이다. 임기가 끝나가는 현 총학에 대한 일갈이자 차기 총학을 준비하는 선본에 대한 충고이기도 하다. 이전 총학이 같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이유를 되짚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권자와의 약속을 이행할 방법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하길 바란다. 50대 총학은 꿈꾸었던 바를 이루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혜정박물관에서 만나는
‘서양인이 그린 우리 삶’

미디어·여론 동향 2017.10.23 - 11.5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혜정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서양인이 그린 우리 땅, 우리 삶’ 기획전을 진행한다. (혜정박물관에서 만나는 ‘서양인이 그린 우리 삶’/대학주보 온라인, 2017.10.30) 오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서양 최초의 한국전도 ‘조선왕국전도’를 비롯한 130여 점이 선보인다. 개항기 조선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맥Kenzie의 기록, 헤르만 산더의 사진과 보고서 등 서양인이 남긴 기록을 통해 과거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우리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주관 제4회 로고스 오후스 심포지엄이 안희정 충남도지사 특별 강연으로 열

만평

이래도 모른 척 하실건가요?



이 주의 주제 - 폐시약통 처리

비 안오면 그만이지, 안 건드리면 그만이지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처리가 미숙하다면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화학반응이나 유리병 파손으로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과에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고를 한다. 하지만 지켜져야 할 안전 관련 규정들이 실험실 책임자의 안전 불감증과 단과대학의 확인 소홀로 무시되고 있다.

10월 20일, 폐시약통이 단과대 외부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전자정보대학 건물 외부에서는 강산인 질산, 염산 병이 외부에 방치되어 있었고, 생명과학대학에는 18병의 시약 통이 밀봉되지 않은 박스에 방치되어 있었다. 규정상 폐시약통을 보관해야 하는 철제 폐시약통 임시보관함은 아무런 병도 품고 있지 못한 채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며칠 뒤 다시 찾아가보니 이전의 것에 더해 27병의 시약 통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이 중 6병의 뚜껑이 열려 있었다.

전자정보대학 건물 4층에 위치한 동서의학대학원 실험실과 생명과학대학을 취재한 결과 두 단과대학 모두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우리 실험실 책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폐시약통을 외부에 방치해 놓은 사람이 없다.” 이에 더해 생명과학대학

은 “행여나 외부에 통을 방치해 놓는 문제가 생길까봐 항상 확인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반출된 폐시약 및 폐시약통 처리를 담당하는 관리과에서는 폐시약을 밖에다 그냥 방치한다면 누군가 병을 건드려 깨질 수도 있고, 비가 와 어딘가로 흘러들어 간다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시약통 임시보관함 존재 이유를 밝혔다.

실험 폐기물 반출 의무는 실험실 책임자에게 있다. 행정실은 관리과에서 받은 안전관리 규정을 실험실 책임자에게 전달한다. 실험실 책임자는 대부분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조교들이다. 실험실 책임자는 시약병을 밀봉하지 않은 채로 외부에 방치하는 것에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행정실의 답변처럼 그 누구도 시약병을 외부에 방치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많은 시약병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관리과에서 임시보관함이 작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었다. 미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번에 배출한 폐시약병들을 임시보관함 외부에 방치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 하에서 보관함에 넣기 위해 시약병을 나누어서 배출하는 성의리도 보여야 한다. 안전은 귀찮다. 하지만 귀찮아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실험실 책임자들의 ‘비 안오면 그만이지’, ‘지나가다 안 건드리면 그만이지’라는 안일한 생각,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가 본인들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간 국립외교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그는 “모두가 선망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외교관을 선택했다”라며 “많은 외국인이 한국보다 일본을 선호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고, 이를 외교로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학과에서 배운 전공 지식과 교양에서 얻은 인식들이 시험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후배들의 도전을 당부했다.

서울시내 9개 대학 교수단체인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합회’(서교련)가 공식 출범했다. (서교련 창립총회, 초대 이사장에 이성근 경희대 교수회 의장/헤럴드경제 외, 2017.10.27) 서교련에는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교수회가 참가하며 이들은 대학 자율성을 찾자는데 뜻을 모았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경희대 이성근(부동산학) 교수는 “현직 교수회 의장단의 뜻을 모아나아가기 위해 모였다”며 “기존의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 한국 사립대학 교수회연합회와도 뜻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교련은 대학의 민주적 경영과 교권 확립, 대학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삼았다.

회의(會議)주의자들은 가라

세시봉

양윤주 (서울캠퍼스 뉴스팀장)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공약을 지키기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만든 여론조사기구,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가 결과를 내놨다.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471명이 2박 3일 동안 합숙토론을 하며 동시에 이뤄진 4차까지의 여론조사라는 대장정이었다. 그들이 일궈낸 답은 단순한 합의, 그 이상이었다. 시민참여단은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각종 자료를 섭렵하고, 질의응답과 분임토론을 하면서 사안의 전문가가 됐다.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잘 아는’ 시민들의 답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숙의 과정 역시 공개되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그 자체가 공감과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했다. 형식적 투표를 넘어 적법한 민주적 결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집단들 사이에서 ‘실제적 숙의’가 이뤄진 ‘숙의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 주된 평가다.

우리학교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상을 눈여겨 봐야 한다. 우리학교도 내 각종 회의체, 위원회는 세기 힘들 정도로 많다. 이들이 모여 학교의 각종 사안에 대해 회의를 한다. 그 회의는 보통 ‘대표자’로 구성된다. 대표자끼리 모여 회의에 회의를 거친다. 가히 ‘회의주의자’라 칭할 만하다. ‘회의주의자’끼리 결정한 사안은 정작 당사자에겐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론화위원회’ 도입 시급

지난 1학기 기대 속에 도입된 ‘대기순번제’가 대표적이다. 올해 초 담당부서인 학사지원과, 정보처와 학생대표인 당시 정경대학 이동진(경제학 2012) 회장, 외국어대학 김주와(중국어학 2015) 회장이 모여 회의했다. 학생 편의를 위해 학생대표까지 포함해 회의를 거쳤다던 ‘대기순번제’는 오히려 전례 없는 불만을 샀다. 결국 적잖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음에도 대기순번제는 한 학기 만에 증발해 버렸다. 구성원의 의견이 심도있게 반영되지 않은 탓이었다.

학생 의견을 수렴하길 원하는 회의체에서 주로 선택하는 방법은 설문조사다. 우리학교의 설문조사는 대부분 대량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수많은 회의체가 저마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지를 뿐만 아니라 학생 메일함에 가지각색의 설문지가 수북하다. 설문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학생 대부분은 설문 주제에 관한 깊이 있는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얼떨결에, 혹은 그날의 ‘뻘’에 따라 설문을 진행한다.

학생은 학생대로 꾀곤하고 회의체는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한다. 예산낭비는 물론, 학생의 피로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다. 당장 대학구조개혁, 캠퍼스 간 유사학과 논쟁 등 장기간 이어지고 그만큼 복잡한 갈등 사안이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알고 내리는 판단과, 모르고 내리는 판단은 다르다. 과정이 부여하는 정당성 역시 중요하다. 현상에 대한 자발적 탐구와 이해, 그리고 토론의 방식은 또 다른 학습이기도 하다. ‘회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회의에 대해 ‘회의’를 느끼길 바란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이수형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희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33-2000-2, FAX 031-204-8121